

# 민주, 쌍특검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정국 긴장

### 야 "대통령 배우자 성역 없는 수사" vs 여 "총선용 악법 수용 불가"

여야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 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대장동 특검) 등 2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

방해하려는 법안이고,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총선용 정쟁을 일으키려는 법안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긴급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후 수사 등 조건부 수용안도 수용 불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인지 묻자 "총선용 악법이라 분

명히 말했다.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 아닌가.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라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을 시사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쌍특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앞선 양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 의지를 다지며 대역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김 여사의 혐

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 여론전을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들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은 비켜 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최가 없다면 왜 정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하니"라고 쏘아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비대위를 실패할 결심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라"며 "굿바이 윤석열 김건희"를 외치지 못하면 국민이 '굿바이 한동훈'을 외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비대위는 '비리 척결엔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법안이 통과된 뒤 여당도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등 만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의당과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양측이 극도의 긴장 속에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쌍특검을 두고 별도의 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법안 상정 날짜를 조정할 수 있지만, 현재 쌍특검과 관련해 여야 간에 진행되는 협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尹 대통령 참모진들 총선 출마 러시

### 강명구·주진우·이원모 비서관 이번주 사임

내년 4·10 총선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판까지 보좌했던 측근 참모진도 하나둘 여권의 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고향인 경북 구미를 출마를 위해 전날 사직했으며,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법무부 장관 인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사임한다고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강명구 비서관은 2021년 6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부터 캠프에 합류해 일정 기획을 총괄하며 신뢰를 쌓았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일해왔다.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원모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가 유력하다.

주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가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사직했다. 윤 대

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네거티브 대응을 도왔고 당선 뒤에는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인사검증팀을 이끌었다.

이 비서관은 과거 검찰 내 '윤석열 라인' 막내였으며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이 비서관도 주 비서관과 함께 인수위 인사검증팀의 주축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들의 사직과 맞물려 후임 인선도 진행 중이다. 강명구 비서관 후임으로는 김동조 국정메시지 비서관이 수평 이동한다.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하는 두 비서관 역할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후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인 최진웅 메시지팩토리 대표가 발탁됐다.

주진우 비서관 후임에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법률비서관실과 국제법무비서관실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인사비서관으로는 최지현 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尹, 신년 업무보고 정책 드라이브 초점

### 2기 내각 관료·전문가 중심...노동·교육·연금 개혁 주제 다음주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이뤄지는 신년 업무보고 형식을 기존 개별 부처 중심에서 주제별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주제별로 관련 부처들을 묶어서 종합적인 신년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업무보고는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일례로 저출산을 주제로 소관 기관인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모여 대책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 출범 3년 차이자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굵직한 국정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면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부처

간 간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동·교육·연금 등 정부의 3대 개혁 분야도 주제별로 보고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주제는 이르면 다음주에 확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도 참석하는 '타운홀' 방식의 업무보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폐대를 이루던 '2실장 체제'를 정책실장을 더한 '3실장 체제'로 개편하는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이르면 연초에 출범 예정인 과학기술수석실까지 더해지면 대통령실은 '3실장 6수석' 체제가 완성된다.

2기 내각도 정통 관료·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며 정책에 초점을 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사문화를 끝낸 최상목 기획재정부·강도형 해양수산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내달 인사문화회가 끝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밟아 '정책 내각'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개각의 '마지막 퍼즐'인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검증이 진행 중이다. 검찰 출신 중에는 길태기 전 고검장과 박성재 전 고검장이, 비검찰 출신으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노동계 인사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반도체공학 분야의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힘 총선 출마예정자 "불체포특권 포기"

### 14명 공동선언문 발표

국민의힘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2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다.

권오현(서울 중구 성동갑), 김기홍(인천 연수을), 김보현(김포갑), 김성용(송파병), 이승환(중앙을), 이창진(부산 연제) 등 14명의 국민의힘에 비후보 및 출마 예정자들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의 공동 선언문'을 서약 형식으로 발표했다.

전날 한 위원장이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

라고 밝힌 데 대한 화답 차원이다.

이들은 한 위원장 연설 직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공동선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시대 정신에 공감하고 나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를 규탄하며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 등 51명이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고, 지난 7월 기준 국민의힘 의원 총 110명이 서약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